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

연금저축과 IRP(개인형퇴직연금) 세액공제 한도

구분	연금저축	IRP
총급여액 (종합소득 금액)	5500만원 이하 (4500만원 이하)	5500만원 초과 (4500만원 초과)
세액공제 납입한도	600만원	900만원
세액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	16.5%	13.2%
환급세액 (900만원 납입시)	148만5000원	118만8000원

※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음



주요국 횡재세 도입 현황

국가	대상업종	내용
유럽연합	에너지	연대기여금 명목 화석연료 기업 이익이 2018~2021년 4개년 평균 20% 초과시 최소 33% 부과(2022·2023년 한정)
		회원국 별도 횡재세 도입시 부과하지 않음
영국	에너지	석유·가스 25%, 발전 45% 추가 부과 (2028년까지 한시 부과)
이탈리아	은행·에너지	순이자수입 1년 간 40% 부과안 발표 후 반발. 횡재세 규모를 은행 위 험가중자산의 0.1% 제한하는 방안 논의 중
스페인	은행·에너지	8억 유로 초과 은행 순이자 및 수수료 수입에 4.8% 세금 일시 부과
헝가리	에너지·제약· 금융·항공 등	업종 별 다름



경기도 김포시 → 서울시 김포구 변경시 달라지는 점

(자료: 뉴스1)

	김포시	김포구
규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장관리권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밀억제권역(서울)변경으로 규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 -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(표준건축비의 5-10%) 부과 - 4년제 대학 이전 금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의 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신규사업* 협의 가능 * 태리, 고촌 1·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(0.75k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GB 잔여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협의 어려움
재정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 규모 16,103억원 ※ 인구 507,657명 	(참고) 서울시 관악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 규모 9,715억원 ※ 인구 500,582명
대입 혜택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외
세금 혜택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·면지역은 등록면허세, 재산세(건축물, 토지), 양도소득세 등 洞 대비 감면세를 반영 (예시) 등록면허세 제1종 [읍·면] 27,000원 [동] 67,5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밀억제권역(서울)중과세율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취득세) 본점·주사무소 부동산, 공장 신·증설(2.8% ⇒ 6.8%↑) - (면허분 등록면허세) 종별50~140%↑ - (재산세) 공장용건축물(0.25%⇒0.5%↑) - (양도소득세)* 일반세율 + 10% ↑
건강 보험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·어업·광업인,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22%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외
자치권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1]의 시·군 사무 처리 50만명 이상 특례사무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정·도시계획·주택건설 등 42개 사무 삭제 (자치구 ⇒ 서울시) 50만명 이상 특례사무 처리불가
혐오시설 집중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율적 도시계획권한 행사 가능 - 기본계획 수립,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, 개발사업 승인 등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계획 수립불가, 관리계획 중 위임사무만 입안 및 결정, 도시개발사업 승인권 상실 등 - 서울시 직접 결정에 의한 혐오·기피 시설 김포 집중 가능성 우려